

#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



하 남 시  
【 자 치 행 정 과 】

#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

의 안 번 호	2607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3. 2. 3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## 1.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개요

- 출 범 일: 2021. 5. 21. ※ 우리 시 가입: 2021. 5.
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- 설립목적: 지방정부 연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
- 회원정부: 당초 61개 → 22개
  - 연간 부담금: 7,000천원(기초자치단체 인구 수 30만명 이상)
  - ※ 우리 시 ' 22년 납입 (납부액 누계: 7,000천원)
  - 임원현황: 최대호 안양시장(회장)
- 주요기능
  - 기반구축 : 남북교류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·확대 추진 등
  - 역량강화 : 담당 공무원 남북교류협력 실무교육, 포럼·워크숍 추진 등
  - 공동협력 : 구성 지자체간 공동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

## 2. 탈퇴사유

- 민선7기 남북평화협력에 기여하고자 가입한 지방정부협의회로 한두차례의 총회 개최 이외에는 협의회 활동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, 우리 시와 관련된 운영실적이 없어 탈퇴하고자 함

## 3. 행정사항

- 2022.9. 탈퇴 처리 통보(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→하남시)
- 2023.2. 의회보고

## 관련 법령

### 1 지방자치법

**제169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175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**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